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51
----------	------

발의연월일 : 2025. 2. 27.

발 의 자 : 박정현 · 복기왕 · 박수현
장철민 · 김준혁 · 조승래
김영환 · 김성희 · 송재봉
강준현 · 채현일 · 염태영
서미화 · 이광희 · 용혜인
윤종균 · 정혜경 · 전종덕
장종태 · 양부남 · 이수진
위성곤 · 박용갑 · 허성무
황명선 · 이재강 · 신정훈
전진숙 · 이기현 · 박주민
윤호중 의원(3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로 농촌 인구가 빠르게 도시로 유출되면서 도시는 과밀화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어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온 공동체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

으로 추진되었고, 물질적·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함으로써 마을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읍·면·동 또는 통·리 등 지역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의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주민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마을공동체는 주민 등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성·독립성·책임성을 갖추어 모든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니며,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안 제3조).

라.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

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소속으로 각각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당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공동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지원사업, 전문인력, 관련 통계자료 구축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기금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차.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이란 읍·면·동 또는 통·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의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등이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에 기반하여 자발적으로 구성된 모임, 단체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주민등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추구하거나 지역사회 공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지원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에 행정적
·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공동체는 이 법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될 것
2. 모든 주민등에게 개방되어야 하고 다양성·독립성·책임성을 갖
출 것
3. 모든 주민등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닐 것
4.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 상호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
5. 다른 마을공동체 및 유관 행정기관 등과 상호협력할 것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
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
력하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며, 지원사업의 추진
에 있어서 마을공동체들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운동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 또는
기관과 그에 소속된 구성원은 그 단체 또는 기관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 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제7조(마을공동체계획의 수립) ①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규정, 정관 등으로 마을공동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가 마을공동체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시·군·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시·군·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계획 및 시·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및 마을공동체의 기본 현황과 여건 분석
2.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3. 다양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연계·협력 방안
4.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민관협력의 추진체계
5.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④ 시·군·구계획은 제7조에 따라 마을공동체가 수립한 마을공동체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시·도계획은 시·군·구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⑤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10조에 따른 해당 지역의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시·군·구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역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및 시책사업
5.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지역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제11조에 따른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소관사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

제10조(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소속으로 각각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연계와 협력방안
3.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의 운영
5.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는 주민등과 마을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조정
3.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조정
4. 제14조에 따른 중앙지원기관의 운영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6.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시·도 및 시·군·구와 마을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양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제9조의 기본계획 또는 제8조의 지역계획의 수립·변경과 중앙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개최 등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마을공동체 지역지원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계획 수립의 지원 및 자문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와 지원정책의 연구 및 분석
3. 마을공동체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시행
4. 주민등, 공무원, 제18조의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5. 마을공동체 활동의 인식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6. 마을공동체 간 연계·협력 및 협의회 설립 등 네트워크 구축 지

원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지원기관의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역지원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지원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이하 “중앙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지원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분석
4. 전문인력, 공무원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5. 마을공동체 관련 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6. 지역지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7. 마을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지원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중앙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및 지원

제15조(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 ① 마을공동체는 제7조에 따른 마을공동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에 추진 활동 또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주체로서 참여시키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활동 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마을공동체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제8조의 지역계획 및 제9조의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마을공동체 역량강화) ①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이 학습공동체로서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역량강화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2. 전문인력의 지역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문인력은 해당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제19조의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9조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의 등록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전문인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제19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공동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마을공동체 관련 통계자료의 구축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마을공동체기금)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구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고향사랑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취지에 따라 별도의 마을공동체지역기금(이하 “지역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의 마을공동체계획의 수립에 대한 지원
2. 제13조 마을공동체 지역지원기관과 제14조의 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의 운영에 대한 지원
3. 제15조의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4. 제25조의 마을공동체재단에 대한 출연 및 운영 지원
5.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6. 기금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기금의 운영 및 관리)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기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관리하며 지역기금은 시·도지사가 운영·관리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기금과 지역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지역위원회 및 중앙위원회에 각각 보고한다.

제2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소속으로 독립적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장은 기금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건전성 감독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시·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중앙의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 ⑥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금의 관리·운영·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민간기금의 조성) ①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민간기금은 제25조에 따른 마을공동체재단이 관리·운용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기업·법인·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편의와 세제상의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민간기금은 제20조에 따른 마을공동체기금과는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⑤ 민간기금의 조성 절차와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5조(마을공동체재단) ① 마을공동체는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마을공동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민간기금의 관리·운용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한 사업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마을공동체재단의 설립·운영, 지원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마을공동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마을공동체의 국유·공유재산 활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마을공동체가 유희 또는 저활용된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용·수익 또는 대부 신청인에 우선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공유재산 중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공유재산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조

성된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유희 또는 저활용된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 등의 현황파악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① 국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또는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자료제출 요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중앙지원기관 또는 지역지원기관이 아닌 자는 마을공동체 지원기관 또는 지원센터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장 벌칙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중앙지원기관 또는 지역지원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벌칙) 제5조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제32조(과태료) ① 제29조를 위반하여 마을공동체 지원기관 또는 지원센터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